탄 원 서

제출 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 귀중 [현재 재판부·사건번호 제출 전 확인]
대상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혐의 및 절차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관련 직권남용
사건번호	_____ [공식 사건검색 후 기재]

1. 시민으로서 드리는 탄원

저는 피고인 이원모과 친족·친분 관계가 없는 시민이며 전체 재판기록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후보자 인사검증의 실무행위와 지명권 행사 사이의 구별를 사실과 증거로 구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의 무고함이나 인품을 직접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중대한 사건일수록 개인의 실제 행위와 고의, 책임 범위를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2. 현재 확인되는 사건 경과

특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고 2026년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종합특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 과정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2026년 8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0월 26일로 예정됐던 선고 결과는 최신 공식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개인별로 가려야 할 사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부여된 실제 확인·조회 업무, 검증 보고서의 작성·검토·결재자를 특정하고 누락된 항목이 법률상 필수인지, 지시를 받거나 전달한 기록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십시오.

4. 반대되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상급자의 결정과 실무 비서관의 보고·검증 업무를 동일하게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구체적 직권 행사인지, 부실한 행정처리에 그치는지 형사책임 요건으로 구분해 주십시오.

5. 적용 법률과 판단 요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의 실무적 조사·조회와 후보자의 최종 지명결정은 다른 권한입니다. 어느 법령상 의무를 가진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시켰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6. 사건기록에서 특정하여 확인할 증거

검증 체크리스트, 자료 조회·회신의 시각, 상급자 지시와 본인 결재 여부, 완료하지 못한 필수 절차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7.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비적 양형 요청

실무상 재량의 크기, 검증의 기초자료 접근 가능성, 문서상 자기 판단의 표시 여부가 확인된 범위대로 책임을 나눠 주십시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주시되, 확인되지 않은 반성·가족관계·건강을 선처 사유로 추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8. 결어

특히 후보자 인사검증의 실무행위와 지명권 행사 사이의 구별를 상세한 증거로 확인하시어, 피고인 이원모의 행위 중 고의와 구성요건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십시오.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의 실제 역할에 상응하는 판단을 청합니다. 재판의 독립성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확인 가능한 공개 출처 (보도는 공판조서·판결문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08.28 연합뉴스 | 헌법재판관 지명 사건 결심공판